'여수세계박람회 국제 심포지엄' 개막

"해양·인류 미래 제시하는 계기 될 것"

기후변화로 해수면 상승 대책 마련 시급

관람객 연안 중요성 체험 프로그램 절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제1회 국제 심포지엄'이 22일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막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빈센트 곤잘레스 로세르탈레스 세계박람회기구(BIE)사무총장과 페트리시오 알투로 버날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사무총장 등 박람회와 해양·연안문제를 다루는 주요 국제기구 수장들이 대거 참여했다. 또 슐레진져 미국 일리노이대 교수와 우지챵 상하이박람회 총괄기획관, 정래권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등 여수세계박람회와 관계된 다양한 분야의 석학과 전문가들 그리고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장승우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장, 오현섭 여수시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 첫날에는 기후변화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 미래 해양자원과 기술의 전망 등 주제가 다뤄졌으며, 이튿날에는 여수선언과 여수프로젝트, 여수박람회 기본구상과 기본계획 등 주제가 다뤄진다.

세계박람회와 해양 분야의 석학·전문가들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2012 여수세계박람회는 해양과 인류의 미래를 제시하고 지혜를 모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장승우 여수박람회조직위원장도 개회사에서 "심각한 파괴의 위협에 직면한 해양생태계를 유지하고 복원하기 위해서는 해양관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세르탈레스 BIE사무총장은 축사에서 "박람회 유치가 확정된 만큼 이제는 '어떻게 기억에 남는 박람회를 개최할 것인지'를 고민해야할 때"라며 "여수박람회는 인류의 근원인 해양과 연안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람객들이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세실 마우리젠 노르웨이 기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후변화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최근 지표면과 해양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빙하가 녹으면서 지난 100년간 해수면이 17㎝이상 상승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해양생태계에 많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으며, 여수박람회를 통해 '기후변화가 해양과 연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고 또 대안이 모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래권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는'저탄소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기후대책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목표치가 설정돼야만 탄소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으며, 현재의 기술과 재정으로는 기후대책을 세울 수 없다는 3가지 통념은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제심포지엄 이틀째인 23일에는 여수프로젝트와 여수선언 그리고 여수세계박람회 기본구상과 기본계획 등이 국제적인 전문가의 안목에서 논의된다, 이를 통해 인류가 당면한 환경문제와 이를 극복하는 방안, 그리고 여수세계박람회의 의의를 드높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방한한 로세르탈레스 BIE 사무총장도 이날 오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박람회 인정 승인 건을 비롯한 여수박람회 주요 관심 사안에 관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여수세계박람회 제1회 국제심포지엄이 22일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시작됐다. 박람회와 해양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전세계 기후변화 대책과 해양관리 방안, 여수선언, 여수박람회 기본 계획 및 구상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쌀 직불금 국정조사 여야 증인 선정 공방

특위위원장 포함 18명 구성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 수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다음달 10일부터 12월5일까지 26일동안 실시된다.

핵심 쟁점사안인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자 명단 등 관련 자료는 정부가 국정조사 개시 전까지 국조특위에 제출하되, 명단 공개기준은 국조특위에서 결정키로 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창조모임 권선택 원내대표 등은 22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쌀 직불금 국조 운영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국조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한나라당 9명, 민주당 6명, 선진·창조모임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키로 했으며, 조사기간에 기관보고 3일, 청문회 3일, 문서검증 및 현장조사 4일을 포함시켰다.

특히 명단 공개와 관련,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공기업 임원, 언론인, 고소득 전문직업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명단을 우선 공개하되, 본인이 원할 경우 공개하기 전 본인 신청으로 소명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정조사의 증인 선정과 관련,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 전윤철 전 감사원장 등 전 정권 인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과 직불금을 수령한 한나라당 김성회, 김학용, 임동규 등 현직 의원을 불러낸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전직 대통령이 국회 증언대에 선 사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1988년 5공 광주특위에 출석한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노 대통령의 증인 채택 여부는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행안부 방침 변경에 혼선 … 접수 중단 사태도

■ 광주·전남 직불금 신고 실태

공무원의 쌀 직불금 자진신고 접수 사흘째인 22일 행안부의 신고방침 변경에 따라 광주·전남 일부 지자체에서는 접수 중단 사태가 빚어지는 등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져 전날에 비해 신고 건수도 거의 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쌀 직불금 부정 수령자들이 총 수백억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 감면혜택까지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돼 파문이 예고되고 있다.

◇**광주·전남 신고 실태**=이날 광주·전남 일부 지자체는 행안부의 자진신고 방침변경에 따라 신고 접수를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특히 '직계존비속이 직불금을 받았을 경우 본인과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만 신고하라'는 행안부의 수정 지침이 전달되자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북구청은 이날 오전 이같은 지침을 반영하지 않은 채 신고자가 180명이라고 밝혔다가 변경된 지침에 따라 신고자가 43명이라고 뒤늦게 번복했다.

이에 따라 자신신고 사흘째를 맞았지만 이날까지 광주·전남 지자체에서는 경찰·행정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208명이 신고하는 데 그쳤다. 광주에서는 이날까지 경찰 45명을 포함해 149명이 신고서를 냈고 전남도에서는 도 본청과 일선 시·군을 합쳐 모두 59명이 자신신고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쌀 직불금 부정 수령자들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감면혜택까지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백재현 의원이 22일 배포한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방청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액은 지난 2003년 3천849건에 202억원, 2004년 3천499건에 273억원, 2005년 3천607건에 193억원에 머물다가 지난 2006년에는 4천308건에 346억원, 지난해에는 9천425건에 774억원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직불금 수령 적·불법 판단 기준**=본인이 땅 주인이고 농사에 간여했으나 일부 위탁한 경우에는 '자경(自耕)'으로 인정돼 직불금 신청과 수령에 문제가 없으나, 위탁영농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하다.

내가 땅 주인이고 임대농(소작농)에게 농지를 빌려준 경우에는 자기 농지라도 직접 농업을 경작하거나 경영한 경우가 아니므로 직불금을 신청·수령할 수 없다. 만약 이 경우 지금까지 땅 주인이 임대농 대신 직불금을 타왔다면, 이는 이번 일제 조사를 통해 전액 정부가 환수한다.

본인이 땅 주인이지만 농사는 같이 사는(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가족이 지은 경우는 환수 대상이 아니다. 내가 땅 주인이지만 농사는 같이 살지 않는(세대가 다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가족이 지은 경우 현행 쌀직불금 규정상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사람만 직불금을 탈 수 있다는 원칙이 적용돼 아들이 타간 직불금이 모두 환수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삭제된 쌀 직불금 명단 복구"

김황식 감사원장 "실태 파악 후 문제 직원 엄중 조치"

김황식 감사원장은 22일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 폐기 논란과 관련,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삭제하도록 했던 감사자료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여부를 정확히 규명하는 한편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특히 "내부적인 성찰의 차원에서 감사 전 과정에 대해 상세한 경위를 파악해 문제점 등에 대해 개선, 시정하고 책임을 물을 관계 직원이 있는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직불금 부당 수령자 명단 복구 문제와 관련, "2007년 실시한 직불금 운영실태 감사에 따르면 다수의 공무원이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2006년도 직불금 지급 대상자 현황자료 등을 당초의 자료 그대로 복구하거나 원상복구가 어려울 경우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공무원에 한해서라도 대상자 명단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원상복구 방법에 대해 "기존의 감사에서 실시했던 것과 같은 자료와 방법을 사용해 직불금 부당수령 관련 전산자료를 복구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원장은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조치상황을 지켜본 뒤 정부의 조사가 미흡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직무감찰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